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2년 7월

전문가 기고

유일한 ESG 수명연장 방안

주요 이슈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용 동향

ESG 동향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초안 공개

주요 통계

유일한 ESG 수명연장 방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유종민

탄소중립으로 갈수록 배출권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ESG는 그러한 투자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뜬구름 잡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담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ESG와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어떻게 연계되며, ESG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면 좋을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내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EU Taxonomy를 상당 부분 준용하기는 했으나,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2%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녹색분류체계가 물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녹색산업 육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탄생한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산업의 녹색화를 포괄해야 단순한 역제 측면이 아닌 경제 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의 분류체계항목들은 탄소중립만을 위한 협의의 목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Taxonomy에 따라서는 상위 20% 감축 행위만 녹색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에서의 KOC(Korea Offset Credit) 발급행위로 인정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와 ESG 하에서 인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약간의 금리인하 혹은 우대 등 충분치 못한 ESG 금융상품에 그칠 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주지 못해 오히려 녹색분류체계자체가 녹색산업 육성이 아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것이다.

예컨대 녹색채권이 거의 대부분인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는 사회채권과 지속가능채권, 즉 배출권거래제와 관계없는 채권이 많다. 상기에서 설명된 이유일 것이다. 녹색채권이 발행되는 이유는 탄소중립 등 영향으로 시장에서 유행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유행이 꺼지고 투자 관심도가 떨어지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실질적인 마켓이 형성된 배출권거래제와 분리되어 있다면, 할 수 없이 별도의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책에 기댈 수 밖에 없지만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ESG 기준 중 'E' 항목 중에서는 저감 혹은 탄소배출권 관련 활동이 평가되고 있지만,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 매우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산업별, 기업 사이즈별 상황이 다를 것이고, 기준이 배출량인지 감축량인지, 작년 대비 혹은 자산규모 대비인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극단치 기업들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 등이 관련된다. 이 역시 기관마다 평가기준이 다르다.

여러 금융기관들에서도 ESG 관련 신상품 출시 필요성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K-그린뉴딜 관련 상품도 이미 존재하는데 ESG는 평가기준 등 불투명성이 많아 상품 출시에 대한 내외부에서의 회의감도 큰 것 같다. 예컨대 실무에서는, 어느 기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 다른 기관에서는 배제되기도 하는 등 아직 기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공적 평가 기준의 정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장에서 기준이 자율적으로 정립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린워싱(green washing)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이나 녹색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 상충이 존재하는 까닭에, 이러한 탄소중립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감축활동에 있어서 지나친 시간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주체가 나서서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용 동향



김선엽 연구원

지난해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면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 대상의 확대 및 무상할당 축소 등으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① 우리나라 배출권 할당 및 유통시장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多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서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제 3차 계획 기간('21~'25)이 진행되고 있다.

배출허용량의 할당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3차 계획 기간에는 69개 업종 684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다.

3차 계획 기간에는 '10% 이상 유상 할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상 업체들은 배출허용량의 90%만 무상으로 할당 받는다. 나머지 10% 물량은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되어 정부가 보유하고, 경매 등의 방식으로 유상으로 할당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대중교통운영자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3차 계획기간에도 100% 무상 할당 대상이다.

배출권 유통시장은 할당된 배출권이 기업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많은 기업이 배출권 유통시장에서 잠재적인 수요자가 되고, 실제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기업은 잠재적인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1·2차 계획 기간('15~'20) 동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평균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5년 톤당 11,013원이었던 평균 거래가격이 2020년에는 30,411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가격이 급락했고, 최근에는 톤당 2만원 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1·2차 계획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5백7십만 톤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2020년 4천4백만 톤으로 크게 늘어났고, 거래대금도 2015년 6백억원 수준에서 2020년 13조4천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출권 거래 기본원리



※ 자료: 환경부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단위 : 백만톤, 천억원)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거래량 | 5.7 | 12.0 | 26.3 | 47.5 | 38.1 | 44.0 |
| 거래대금 | 0.6 | 2.1 | 5.5 | 10.5 | 10.8 | 13.4 |

※ 자료: 환경부(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② 글로벌 배출권거래제 운용 현황

우리나라 외에도 배출권거래제를 지역이나 국가,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한 사례가 많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2022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전세계 38개 지역 및 국가, 지방 정부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 배출권거래제는 규제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적용 대상, 유상할당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배출량 비중(ETS 커버리지)과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ETS 커버리지는 EU-ETS, 뉴질랜드, 중국, 스위스 등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다만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이 90%로 EU-ETS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운영되고 있다.

EU는 2005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EU-ETS)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4차 계획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EU는 발전, 에너지 집약 산업, 항공업, 알루미늄 제조업, 기타 화학업 등에 속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EU-ETS 적용대상 기업들이 배출하는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39% 수준이다. EU-ETS는 3차 계획 기간부터 유상할당을 기본 할당방식으로 채택하고, 2030년까지 탄소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섹터에 대해서는 무상할당을 폐지할 계획이다.

미국은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출범한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가 대표적이다. 현재 뉴욕, 뉴햄프셔, 뉴저지 등 북동부의 11개 주가 참여하고 있다. RGGI는 발전부문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RGGI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선전, 베이징 등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소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출범시켰다. 현재 발전산업에 대해 적용되고,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국한되고 있다. 적용 산업의 경우 2025년까지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색금속, 제지, 민항 등 7대 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출권의 할당은 초기에는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유상할당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U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 | EU-ETS(2021~2030) | K-ETS(2021~2025) |
|----------|------------------------------------|---------------------------------------|
| 목표 | 1990년 대비 배출량 40% 감축 | 적극적 ·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추진 |
| 참여 섹터 | 발전, 에너지집약산업, 항공업, 알루미늄 제조업, 기타 화학업 |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 등 |
| 규제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
| ETS 커버리지 | 39% | 73.5% |
| 할당방식 | 유상할당이 기본 할당방식 | 유상할당 10% |

※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삼성증권 등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초안 공개



김예나 연구원

EU 집행위원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제안하는 등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4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CSRD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안이 공개되었다.

지난 4월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이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초안을 공개했다.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은 8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중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SRS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시행을 앞두고 보고의 표준을 만든 것이다. CSRD는 ▲종업원 250명 이상 ▲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의 조건 중 2개 이상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2024년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SRS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공통 표준 2가지와 11가지 주제별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첫번째 공통 표준(ESRS 1)은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 시 적용되는 필수 개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 공통 표준(ESRS 2)는 기업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업개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전략과 지배구조, 중대성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주제별 표준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에서 공개해야 할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를 제안하고 있다. 주제별 표준은 공통 표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업의 정책과 목표, 실행계획, 자원 뿐만 아니라 성과 측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오염, 물과 해양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등과 관련된 공개 표준이다. 사회 분야는 내부 인력, 공급망 내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 측면에서의 정보를 포함한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사업활동 프로세스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CSRD와 ESRS의 규범화가 진행되면서 EU 역내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강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 공통 표준 | 주제별 표준 | | |
|---------------------------------------|--------------------------|-------------------------|---------------------------------|
| | 환경(E) | 사회(S) | 지배구조(G) |
| ESRS 1 일반 원칙 | ESRS E1 기후변화 | ESRS S1 내부 인력 | ESRS G1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
| ESRS 2 일반, 전략, 거버넌스 및 중대성 평가 공개 요건 | ESRS E2 오염 | ESRS S2 공급망 내 근로자 | |
| | ESRS E3 물과 해양자원 | ESRS S3 지역사회 | |
| | ESRS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 ESRS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 |
| | ESRS E5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 | |

※ 자료 :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 (EFRAG), Ernst & Young

ESG 통계 지표

2022년 7월 8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 | '21.10월 | 11월 | 12월 | '22.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녹색채권 | 135 | 144 | 145 | 151 | 162 | 172 | 183 | 186 | 188 |
| 사회적채권 | 747 | 765 | 788 | 794 | 820 | 835 | 871 | 912 | 946 |
| 지속가능채권 | 181 | 199 | 216 | 230 | 233 | 237 | 246 | 279 | 304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 | '21.10월 | 11월 | 12월 | '22.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녹색채권 | 141 | 148 | 148 | 156 | 168 | 173 | 183 | 185 | 186 |
| 사회적채권 | 1,214 | 1,247 | 1,273 | 1,273 | 1,306 | 1,331 | 1,362 | 1,400 | 1,428 |
| 지속가능채권 | 154 | 165 | 180 | 175 | 181 | 182 | 186 | 199 | 213 |

2. ESG 평가

(1) 2022 상반기 서스틴베스트 ESG 등급표(분포)

(단위 : %)

| AA | A | BB | B | C | D | E | 총 기업 수 |
|-----|------|------|------|------|-----|-----|--------|
| 9.8 | 21.7 | 29.1 | 16.1 | 17.4 | 4.5 | 1.5 | 666 |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등급(2021)*

| S | A+ | A | B+ | B | C | D | 총 기업 수 |
|---|----|-----|-----|-----|-----|----|--------|
| 0 | 13 | 178 | 153 | 285 | 300 | 21 | 1,005 |

*2022-1차 조정 결과 반영

3. 기타 통계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 기업 수

(단위 : 개)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 한국 지지 기업수 | - | 4 | 2 | 12 | 68 | 24 | 110 |
| 글로벌 지지 기업수 | 280 | 298 | 377 | 730 | 1,230 | 679 | 3,594 |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 | |
|--|-----------------------------|
|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 7월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용 동향 |
| 2월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 8월 여성임원 할당제 시행 |
| 3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 9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동향 |
|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 10월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
|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 11월 한국기업의 ESG 평가 결과와 과제 |
| 6월 新 기업가정신 특집 | 12월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용 동향

김선엽 연구원
T. (02)6050-3139 | E. sunykim@korcham.net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초안 공개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im@korcham.net

ESG 통계 지표

신새미 연구원
T. (02)6050-3143 | E. sshin@korcham.net